구멍난 원전 … 민심 핵폭발

한빛 4호기

착공	1990년 05월 26일
운영허가	1995년 06월 02일
상업운전 개시	1996년 1월 1일
수명만료(40년)	2024년 6월 1일
원청	현대건설

영광 범군민대책위 "이달 내 1만명 총궐기 시위"

한빛 4호기 가동 중단·부실시공 진상규명 촉구

한빛원전이 자리 잡은 영광은 물론 광주지역 시민사회 전반에서 한빛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원자로를 둘러싼 격납용기 내부 철판 부식과 구멍에 이어 수직외벽과 돔 모형 외벽 경계지점 콘크리트 내부에 사실상 도넛 모형의 빈틈이 발생, 설계기준 두께 120㎝가 아닌 100㎝로 감소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영광 주민들의 경우 잇따른 원전 고장 및 사과와 더불어 과거 한빛 4호기 건설 당시(1992년) 제기됐던 '콘트리트 타설 불량' 의혹이 25년만에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크게 분노하고 있다.

영광 주민들로 구성된 한빛원전 범 군민대책위원회는 1일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앞에서 항의 시위를 열어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 당국을 성토하면서, 오는 10일 청와대 방문 항의서한 전달, 이달 중 2차례 총인원 1만명 규모의 주민 총궐기 시위를 예고했다.

주민들이 결의문을 통해 요구한 사항은 크게 5가지다. 우선 부실이 확인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한빛 4호기(현재 가동 중지 상태로 정비중) 및 동일 원전을 즉시 가동 중단하라고 주민들은 요구했다. 이어 한빛원전 전체(1~6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실시공 진상규명 및 원인규명도 주장했다.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타설시 제기됐던 부실시공 의혹을 묵살한 한수원과 정부 당국의 사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공동조사단' 구성도 요구했다.

주민들은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도 주장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 안전을 규제해야 할 원안위가 되레 원자력진흥에 그동안 골몰하면서 원전에서의 고장과 사고, 설비 결함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주민들 의견이다.

주민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한빛 1·2·3호기 격납건물 내부 철판 곳곳이 부식되고 구멍이 발생해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철저한 원인규명없이 한수원의 요청을 받고 재가동을 승인했다"며 원안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주민들은 또한 "한빛 3·4호기 건설 당시 주민들은 격납건물 콘크리트 타설시 부실시공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전 당국이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공사를 완료해 결국에는 원전 안전에 구멍이 뚫리고 말았다"고 원전 사업자와 당국을 비판했다.

주민들은 이날 정부와 한수원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발송했다. 오는 10일에는 공동집행위원장 등 집행위원 28명이 청와대 앞에서 '군민의견 전달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이달 중 2차례 한빛원전 앞에서 궐기대회도 계획했다.

범군민 대책위 관계자는 "국내 원전 중 콘크리트 외벽이 구멍이 뚫린 것은 한빛원전 말고는 없지 않느냐.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25년 전 콘크리트 타설 불량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묵살돼 결국 이러한 결과를 불러왔다는 점"이라며 "정부와 한수원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만8000명의 주민들과 함께 한빛원전 폐쇄 운동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 환경단체인 핵없는세상 광주전남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연설에서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 나가고 신규 원전건설 계획 폐기, 노후 원전 폐쇄를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새정부의 탈핵관련) 약속의 실행은 원안위의 해체, 안전하지 못한 핵발전소의 전면 가동중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 관계자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외벽은 핵발전소의 기밀성을 유지하고 비상시 방사능 외부 누출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다. 소위 '핵발전소의 5개 방호 장치' 중 4번째가 격납건물 철판, 5번째가 콘크리트 외벽"이라며 "한수원이 자랑해 오던 5개 방호벽 중 2개에 결함이 생겼다는 것은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광 주민들로 구성된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 관계자들이 1일 한빛원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4호기 부실시공 관련자 및 부실시공 의혹 묵살자 처벌, 결함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 제공〉

ICBM '안보 정국'

與·靑 "대화·제재 병행"

3野 "베를린 선언 폐기"

'정치 하한기'인 8월이지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인한 안보 정국이 형성되고 있다.

북한의 ICBM을 현실적 위협으로 간주한 미국이 '초강경' 모드에 돌입하고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직거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불 붙는 형국이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도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안보 이슈를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에서는 강력한 안보체계 구축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대화·제재 병행'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일단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안보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인 만큼 정부의 대응은 '균형'이 잡힌 적절한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으며 사드 배치도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당도 청와대 엄호사격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현실적인 대북 압박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답답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안보정책을 둘러싼 대여 공세의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전체적인 북한 핵 문제와 외교적 현실을 넓은 안목으로 성찰하지 못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보수 야당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직거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야권도 미국과의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대북 압박 정책 외에는 제대로 된 북 핵 해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여야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 현재의 대북 위기 국면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방의원들 '한빛원전 안전성' 촉구

"모의실험해 대응 메뉴얼 개발"

한빛원전의 안전성과 투명성 보장을 촉구하는 광주와 전남·북 지역 광역의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일 민중연합당 이미옥 광주시의원,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은 성명을 통해 "한빛원전 사건에 대비해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한 대응 메뉴얼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빛원전은 광주, 전남·북을 경계로 무려 6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지만 사고시 어디까지 영향이 미칠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세 지역 광역자치단체들은 각기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메뉴얼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빛원전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절풍이 부는 한반도 기후 특성을 고려해 바람의 방향과 풍속 그리고 사고 등급에 따라 그 피해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를 파악한 다음 '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메뉴얼'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광주·전남·전북 광역자치단체는 한빛원전 사고에 대비한 모의실험을 통한 방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돔 형태의 원자로 격납 건물은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한 원전의 최후 방호벽에 해당하는 곳으로 완벽한 기밀성(氣密性)과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한빛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정부와 원전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을 조속히 시행하고, 시공 잘못과 관리 감독 부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안출발 일본여행
올 여름 휴가 가족 · 연인과 함께 기타큐슈로 떠나세요♪
※ 여름기간 : 2017년 7월 28일(금)~9월 21일(목)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 A 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 금 환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 선착순 한정 특가
항공 4일(매주 월요일, 목요일)
북큐슈 펜션특가 4일 499,000원 부터 (8/1, 8/5, 8/11)
북큐슈 4일 699,000원 부터
나가사키 4일 799,000원 부터
야마구치 4일 799,000원 부터
큐슈 · 오카사 4일 단, 한번! 799,000원 부터 (8/28)
◇포 함 사 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지량,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개인 여권 및 경비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 부터
2017년 제일 긴 추석연휴가 온다~!!
9/30(토)~10/9(월) 매일 전세기 운항
[실속] 북큐슈 898,000원 부터
[품격] 북큐슈 1,098,000원 부터
[품격] 나가사키 1,098,000원 부터
[품격] 야마구치 1,098,000원 부터

다낭 무안출발 베트남항공
여름 휴가간(3박5일)
8/7(월) 단, 1회! 특가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699,000원 부터
(둘째날 오전 자유시간)
◆ 포 함 사 항 : 무안 ↔ 다낭 왕복항공요금,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인 가이드,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차량 내 생수
◆ 불포함사항 :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성인 $40, 만 12세 미만 $30), 개인 경비, 선택 관광, 매너팁, 싱글차지(3박 – 준특급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노팁 노옵션
다낭 · 후에 · 호이안 1,299,000원 부터
◆ 포 함 사 항 : 무안 ↔ 다낭 왕복 항공요금,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인 가이드,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전신안마 90분 2회, 바구니배, 바나산국립공원+케이블카, 호이안 야간시티투어+씨클로, 투본강투어, 차량 내 생수, 가이드&기사 경비
◆ 불포함사항 : 개인 경비, 매너 팁, 싱글차지(3박 – 준특급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제주도 웰빙 2박3일
349,000원 부터
7/21(금)~8/20(일)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홍도&흑산도 1박 2일
245,000원 부터

※ 날짜와 인원 수에 따가 가격이 다르오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